

2006. 11.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충청북도의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조일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5년 3월 18일(법률 제7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의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업을 이루는데 지역간 갈등과 걸림돌이 될 뿐이며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당해 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동안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150만 도민은 소외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을 뿐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